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4차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 학습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2.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 학습목표

1.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

I.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1.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과 개인정보의 의미

데이터3법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에서는 동법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구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왜 보호되어야 하고 또한 왜 규제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개인을 둘러싼 정보는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다. 육안으로 식별되는 개인정보도 있지만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정보도 많다. 이렇게 수많은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제공자측에서는 물론이고, 정보주체자인 일반시민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를 통해서 파생될 위험에 대한 상황을 스스로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야만 자신의 개인정보사용 여부에 대한 진정한 ‘동의’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원칙, 이용방법, 이용제한, 오남용을 통한 침해사고의 정의, 침해로 인한 분쟁시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른 법률들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므로 어떤 의미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총망라하는 거대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되는 전체적인 법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동법의 목적을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동법에서 적용하는 대상들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동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이러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보주체’는 누구를 말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가명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 허용목적은 무엇인지 등이다.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원칙을 8개로 천명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가 갖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2조 정의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II.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란 개인정보이다. 보호대상이 된다는 건 다른 의미로는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초기에는 보호대상이기만 했던 ‘개인정보’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정보서비스기술의 발달(4차 산업혁명)이 촉진되어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이제는 활용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로 부터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도 2020년 2월 개정에서 변모하게 되었으며, 가명처리된 ‘가명정보’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개인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이든지, 또한 처리·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자이든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개인정보처리자) 동법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정보주체)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정의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 판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다시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광의적 의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가. 광의적 의미

먼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중에서 다음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
이때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목)”

나. 협의적 의미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의 세 유형중 첫 번째(가목)와 두 번째(나목)의 유형을 개인정보

보로 언급하면서, 세 번째 유형(다목)은 별도로 ‘가명정보’로 다뤄진다. 따라서 세 번째 유형의 ‘가명정보’를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가명정보를 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유형을 협의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표 1: 개인정보 의미]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
광의의 개인정보	협의의 개인정보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
	가명정보	③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목)

2) 판례 정의

가. 개인정보의 확장성: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

한편 법적 정의 외에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2005년 5월에 당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심판했던 헌법재판소의 판례(헌재결 2005.5.26., 99헌마513)가 그것이다. 사건은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위헌심사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존재를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기본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정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까지 정의하였는데, 즉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은 범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헌법재판소에서 정의되는 개인정보 의미]

<p>㉠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p> <p>㉡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p>
--

나. 개인정보의 확장성 유지: 2016년 대법원 판례

한편 이러한 2005년 5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6년 대법원에서의 유사사안에서도 참고가 되어, 여전히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확대되는 정의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05.5.26., 99헌마51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 105482 판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㉔)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㉕)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다.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하급심 판결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 4개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특정인의 범주가 제한적이라면 충분히 뒷자리 번호만으로도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도 있게 된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법원에서 심판한 예가 있다.

판례의 사안은 경찰공무원인 甲(피고인)이 피해자 A의 신고에 따라 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고, 그 후 乙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甲은 ‘A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을 알려 주었다. 이때 甲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에게 제공한 A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A에 관한 정보로서 A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A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주체를 식별가능한 경우, 휴대전화 뒷 4자리 번호 →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함

3)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시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법적 정의와 판례의 예를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보면, 대표적인 예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자신의 통신위치(GPS 및 IP주소 등), 사회적 정보(교육, 근로, 자격 등), 정신적 정보(정치적 신념, 종교 등) 및 신체, 재산 등과 관련된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표3: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시]

-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 통신위치의 개인정보: 통화, IP주소, GPS 등

- 사회적 개인정보: 교육정보, 근로정보, 자격정보 등
- 정신적 개인정보: 기호, 성향, 신념, 사상, 종교 등
- 신체적 개인정보: 신체정보, 의료 및 건강정보 등
- 재산적 개인정보: 개인의 신용정보, 부동산, 주식보유 등

2. 가명정보

1) 도입

가명정보는 처음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포함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데이터시장이 국제적으로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규제에 의해 발이 묶여서 급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잇따르게 되었다. 이로부터 2020년 2월 4일에 동법이 개정되면서 빅데이터산업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개인정보이다. 처음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던 때에는 인지하던 못하던 개념이었으나, 유럽(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불리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¹⁾의 예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2020년에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것은, 부흥하던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빅데이터산업에서 기초가 되는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 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 중에서도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스마트시티, 무인차, 드론 등)을 부흥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명정보)의 필요성에 도입이 되었다. 가명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를 통해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021년 10월에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오늘날 가명정보의 활용은 시대적 숙명처럼 여겨져서, 이제 가명정보가 도입됨에 따라 이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보다는 가명정보에 더 주력하여 활용과 그 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정의

개인정보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정보의 사용·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정의된다(제2조 제1호). 즉 결국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다시 말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동법 제28조의2

1) GDPR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는 <https://gdpr.kisa.or.kr/> 참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명처리라는 것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체되는 등의 방법을 거친 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명정보의 처리 필요성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조치인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1호의2).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 자체에는 개인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있어서, 이를 (가명)처리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에게 비단 맞춤형 디지털서비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므로 개인정보의 이용은 오늘날 시대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사생활보호라는 양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이제 불가피한 당면 과제라고 하겠다.

4) 가명처리의 대상

가명정보의 대표적인 특징은 ‘동의 없이’ 활용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동의 없이 활용되므로 제한이 있다. 즉,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서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8조의2 제1항).



물론 이러한 가명정보는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리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때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제28조의2 제2항). 만일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제2호).

5) 가명처리의 방법과 제한

가. 가명정보 허용목적 및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는 기본적으로 특정 목적, 즉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하도록 하는 정보이다(제28조의2). 문제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가명정보는 다양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서 다른 가명정보가 수집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여러 가명정보가 결합될 경우 정보주체자가 식별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단독 가명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명정보를 결합하게 될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그러한 수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만이 하여야 한다(제28조의3 제1항).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또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지우고 있다(제28조의3 제2항 및 제58조의2). 이를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4호2)

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나. 결합된 가명정보의 반출 요건

또한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제28조의3 제2항). 물론 반출 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다. 즉 가명정보를 결합한 전문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2항에 따라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법 제58조의2)로 처리한 뒤에야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

29조의3 제3항).

이때 결합전문기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제28조의3 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첫번째는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세 번째는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는 경우로 제한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4항). 이처럼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행령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③ 결합신청자는 법 제28조의3 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20. 8. 4.]

다. 비식별화조치

이러한 가명처리는 비식별화조치(Deidentification)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가명처리와 비식별화조치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란 누군가의 정체성이 공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정으로서 크게 2가지의 방법을 말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명화(Pseudonymization)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알아볼 수 없게 변환한 익명화(Anonymization)가 그것이다.

[표 4: 비식별 조치 방법]

- ▷ 비식별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 가명처리
 - 익명처리(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 데이터범주와, 마스킹 등
- ▷ '가명처리'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을 의미함

6)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사항

또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적절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되는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

가. 안전조치의무

첫째는 안전조치의무이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동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는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표 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함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함.
- ▶ 위의 안전성확보 조치 위반시 법적 효과 (법 제73조제1호 및 제75조제2항제6호).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게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기록작성의무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

공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법 제28조의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2항).

[표 6: 가명정보 처리시 의무적 기록작성 내용]

-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
- 기타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위의 의무적인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75조 제4항 제6호의2)

다. 개인식별정보 생성시 정보파기의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어느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법 제28조의5 제1항). 이러한 가명정보 처리가 원만하게 잘 이뤄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칫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를 해야 한다(법 제28조의5 제2항).

만일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법 제71조 제4호의3),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를 회수 및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5조 제2항 제7호의2).

7) 가명처리의 제한된 목적과 위반시 제재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가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며(제28조의2 제1항), 이러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의2 제2항). 만일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법 제71조 제2호).

9) 과징금부과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만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3 중 큰 금액이하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두고 있다(법 제28조의6 제1항 본문).

이러한 과징금부과 산정시 필요한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1항).

참고로 과징금의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별표 1).

<표 7>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I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한편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의6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2항).

즉, 첫째,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거나 또는 둘째,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의 <표 7>에서의 부과기준율이 아닌, 아래와 같은 기준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동법 시행령 별표 1).

<표 8>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II

위반행위의 중대성	금액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표 7>과 <표 8>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여부, 영리목적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 노출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필요적 가중 및 감경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시 임의적 가중 및 감경할 수 있도록 그 재량을 두고 있다.

10) 가명정보의 미래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한 개인정보보호가 오히려 데이터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처럼,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향후 가명정보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 가명정보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소관부처는 각기 다르다. 이러한 내용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아

[표 9: 가명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²⁾]

연번	구분	내용	소관부처
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위
2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
3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위
4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
5	고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위
6	고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위
7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
8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위
9	가이드라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10	가이드라인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교육부
11	가이드라인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행정안전부
12	가이드라인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위

3. 익명정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외에도, 익명정보라는 것이 있다. 즉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거나 또는 정보주체가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익명정보는 광의적 의미로도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받지 않아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더욱이 2020년 2월 4일에는 아예 익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인 제58조의2가 신설되기까지 하였다. 동 조문에서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익명정보에서는 개인정보의 두 번째 유형처럼, 설령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8면

4.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정리 및 예시

앞서 살펴본 개념에 따라,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에 대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9: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비교³⁾]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념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추가 정보의 사용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끔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를 한 정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0-1234-5678 - 2000년 3월 1일생 - 대전시 동구 길동로 돌리 576-1 - 2020년 8월 30일 대전 동구에서 5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0-****-**** - 2000년생 남자 - *****@naver.com - 2020년 8월 신용카드 사용금액 2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남자 - 지방거주 - 영화를 좋아함 - 2020년 8월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만원이상
활용 가능 범위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함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되나, 아래의 특정 목적에 한하여는 동의없이 활용가능한 정보 ①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② 과학적 연구(상업적 목적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그림 1>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개인(원본)정보> : (식별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는 그 자체로 식별 가능, (속성값) 주소, 데이터 사용량, 통화시간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데이터 사용량	통화시간	
김길중	010-2356-2356	563456-1234567	서울시 관악구 선림동 oo아파트 1동 1호	1,256mb	169분 47초	
이광현	010-3456-7890	653456-2356984	전라남도 무곡군 xx면 35-56번지	256mb	92분 24초	
성공취	010-1234-9876	783456-3023565	경상남도 △△시 ○○동 1234번지	56mb	56분 31초	
<가명정보 예시> : 그 자체로 알아볼 수 없도록 식별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일련번호 등으로 대체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데이터 사용량	통화시간	
-	0001 * 일련번호로 대체	-	서울시 관악구 선림동	1,256mb	169분 47초	
-	0002 * 일련번호로 대체	-	전라남도 무곡군 xx면	256mb	92분 24초	
-	0003 * 일련번호로 대체	-	경상남도 △△시 ○○동	56mb	56분 31초	
* 일련번호, 데이터 사용량, 통화시간은 원본정보와 대조 시 정보주체 확인 가능.						
<익명정보 예시>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속성값도 안전조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데이터 사용량	통화시간	
-	-	-	서울시 관악구	300mb 초과	매우 많음	
-	-	-	전라남도 □□군	100-300mb	많음	
-	-	-	경상남도 △△시 ○○동	100mb 미만	보통	

5. 그 밖의 용어 정리

1)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법 제2조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을 참고함

3호)

- 2)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3)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법 제2조 2호)
- 4)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법 제2조 5호)
-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 6)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 7)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응용시스템
- 8)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 9)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결합될 수 있는 정보(알고리즘, 매핑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이러한 추가정보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사용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구별됨

6.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법 제2조 제5호).

이때 ‘공공기관’에 대해서 동법에서는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